

여성농민과 언니네텃밭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단장)

1. 시작하는 말

1980년대부터 열악한 여성농민의 삶의 개선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던 여성농민조직에서 사업단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지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사실 언니네텃밭 사업은 새로운 경제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여성농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관점의 제기, 새로운 시도들은 많이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 했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겁게 하고 있다. 이 경험은 우리 여성농민운동사에 또 다른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2. 본 말

(1) 언니네텃밭 사업의 개요

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농민 생산자공동체와 도시 소비자가 소규모 텃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 및 1차 가공한 먹을거리를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직거래 하는 사업이다. 매주 1회 제철채소 중심으로 구성된 꾸러미 상자와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텃밭 장터가 중심 사업이다. 특히 제철채소 꾸러미는 언니네텃밭 사업의 핵심인데 여성농민회원인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채소, 두부, 달걀, 콩나물, 김치 등을 매주 1회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면 도시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킨다는 마음과 생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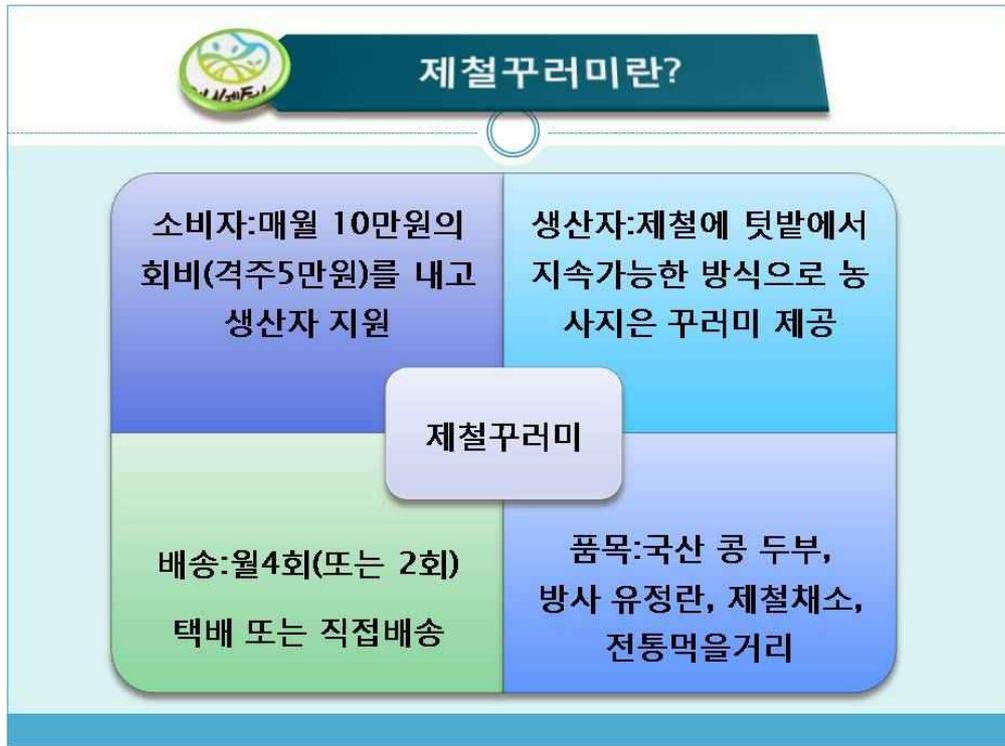
(2) 사업의 제기 배경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수출 지향적 자유무역에 기반하여 대규모 기업농과 소수 초국적 농기업이 농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소농을 몰락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파괴하였다. 또한 녹색혁명형 농업은 대규모 단작화,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석유 의존형 농업 형태를 고착화 시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을 야기 시켰다. 산업자본으로의 농업은 유전자 변형, 광우병 등의 문제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 속에서 농업이 국민들의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대규모 기업농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소농들의 몰락, 식량위기, 환경위기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소농들의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에서는 소농들의 대안운동으로써 식량 즉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통제는 그 나라 민중 특히 농민의 기본권리임을 밝히는 식량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여성농민들의 투쟁조직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역시 국민들의 기본권이자 농민들의 권리인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니네 텃밭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사업의 현황

① 전제되는 몇 가지 기본원칙

-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의 기관산업으로써 농업을 보호·육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대농과 기업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탈피하고 소농중심의 농업구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 사업의 주체는 여성농민이며 여성농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한다.
- 생산자조직은 여성농민회원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기본단위가 된다.
- 지역생산공동체로써 지역의 발전과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한다. (예, 기부꾸러미, 교육 훈련사업, 여성농민회 활동)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농업, 생태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상적 연대를 통하여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② 생산자 조직 현황-(2011년 8월 현재)

지역	수	꾸러미 공동체
강원	3	횡성읍공동체, 홍천시동공동체, 횡성오산공동체
경북	2	상주 봉강 공동체, 안동금소공동체
전남	2	순천 황전 공동체, 나주 공동체
전북	2	김제 공동체, 고창하늘땅공동체
제주	2	서귀포공동체, 제주공동체
경남	1	함안공동체
계	12	※현재 예비공동체 10여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③ 소비자 현황- 채철 채소 꾸러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수

2011년8월말 현재 1,150명

- 자체 카페를 통하여 특판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

2011년 매월 500명 내외

④ 봉강공동체 운영 사례

▷ 지역-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 생산자 구성-봉강리, 이천리에 거주하는 여성농민회원 13명과 준회원 2명

▷ 소비자-경남, 부산등지에 170명

■ 주요 물품 및 매출-꾸러미를 통한 매출 1억 8천

쌀, 된장, 곶감, 들기름, 참기름 등을 판매하여 2천만원

■ 지원 사례

- 2009년 상주시지원으로 공동작업장 신축

- 2010년 행전안전부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확충, 사무실집기 마련, 생산기반시설-하우스, 두부제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저온 저장고- 마련

(4) 기간의 성과

- 소농의 자립기반 확립과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 여성농민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산자’임을 인식하고, 여성농민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다.
- 여성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와 농업 소득에 기여했다.
- 농업, 농민 가치를 인식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기초로 농민과 소비자 간의 연대의식을 높였다.
-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전통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다.
- 생산자들이 교육·훈련 등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활력이 생겨나고 있다.
-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산물 생산에서 품종의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5) 정책적 지원에 관한 입장

12개 생산자 조직 중에서 행전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지원사업(2010년), 마을만들기 사업(2011년)등을 지원 받아 공동작업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꾸러미를 포장할 공간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이는 각 지역 공동체의 역량차이도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애매한 입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탓도 크다.

이 사업을 어영부영 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조언을 듣는다. 그 중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제대로 해라.” 이다. 과연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같은 자생적 민간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지 말지의 선택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이 많다. 물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장려되어야 하고 지원 받아야 하지만 그 결과가 주체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해칠 수도 있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990년도 후반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민단체나 조직들의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꼭 그 길만이 최선인가?”를 몇 번이고 자문하게 된다.

현재 언니네딴밭 사업단은 사회적 기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는 나중에 평가 될 것이다. 현재 중앙 사업단이나 지역공동체의 상황을 봤을때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물적 토대-공간, 시설등과 운영을 위한 지원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원을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의 여부는 주체역량의 상황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3. 맺는 말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는 마음만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언니네텃밭 사업으로 인해 텃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작물들은 텃밭의 주인인 여성농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텃밭을 일구는 여성농민들의 호미질에는 꿈이 생겼다. 텃밭과 여성농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와 함께 언니네텃밭의 꿈은 영글어 간다.